여야, ‘국민투표법’ 개정 시점 대립

민주당 “국민투표법 시급” vs “대통령 안 철회 먼저”… ‘투 트랙’ 협상 필요성 제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9일 여야 5당이 제출한 개헌안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자체 개헌안 마련에 앞서 오는 23일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투표법 처리 시기와 관련 “국민투표법은 위헌 결정을 받은 지 2년이 넘었고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19대, 20대 국회가 자신의 직무 유기뿐 아니라 개헌 진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졌기에 실질적인 개헌 성사 여부와 관계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은 오는 23일 전에 분명히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개헌안 논의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 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미 위헌 판정 난 법안이기 때문에 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국회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합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도 충분히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개헌안을 내놓기 전에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하는데 임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헌과 무관하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국민투표법을 (한국당이) 인질로 잡고 있다”면서 “이중의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헌정특위 간사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간의 야당의 지적을 고려한 듯 “민주당의 당론과 대통령 개헌안은 조문상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여야 간 국회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국회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여당의 개헌안을 대통령 개헌안 ‘판박이’라고 규정하며 자체적인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이인영 의원이 발표한 민주당 개헌안은 대통령 개헌안을 판박이로 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 개헌안이라면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시키고 국회 주도 개헌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과 (민주당 개헌안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개헌안과 다른 것이 뭔지 말해달라”며 “하다하다 개헌안까지 표절을 하는가. 여당 패싱인 민주당이 어떻게 그대로 베껴서 할 수가 있는가, 국회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이인영 의원이 민주당 안을 말한 것을 대통령 안과 대동소이 하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냐”며 “대통령 안은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정특위 간사인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헌정특위뿐 아니라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도 계류돼 있고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발목 잡고 청와대가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한국당이 볼모로 잡고 인질로 삼는다고 발언해서 논의를 더욱 큰 문제로 발전시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투 트랙’ 협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는 정치협상으로 분류해 원내 지도부와 헌정특위원들이 논의하고, 기본권과 지방 분권은 조문화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시스

군산-중국 석도 카페리취항 10주년 9일 군산 국제여객부두에서 열린 군산-중국 석도 한중카페리 취항 10주년 및 항차증편(주 3회 → 6회) 기념식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문동신 군산시장, 쑨샌위 주광주중국총영사, 홍상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상겸 석도국제훼리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취항 축하행사를 갖고 신조선에 승선하여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넣어야”

양용모 도의장, 도·교육청 예산집행 추진 상황 보고 받아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의장은 9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을 촉구했다.

양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의 예산담당 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집행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그 결과 전북도는 3월말 현재 32.5%, 전북도교육청은 27.8%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양 의장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올해 한국GM 군산공장 사태로 지역경제가 파탄 위기에 처한 만큼 공격적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 용역 결과 재정신속집행 추진이 평균 경제성장률 3%중 0.3%p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군산조선소 폐쇄와 한국GM 군산공장 가동 중단 및 폐쇄 결정으로 도민은 절망감과 함께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예산 조기 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추미애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은 금융참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발생한 이른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에 대해 “금융참사”라고 표하며 정부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사건인 것이고 이번만이 아니라 그간 관행이었는지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삼성증권 주가 총액이 3조4000억원이니까 그 33배 규모인 사건”이라며 “특별히 더 심각한 것은 지급된 주식 일부가 실제 매매돼 당일 한 때 11% 넘게 폭락됐던 투자자 6만 명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회사가 유령주식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금융당국 관리 시스템 구멍이 나 있다는 거 확인된 것”이라며 “자본시장 신뢰도가 아직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사고수준이 아니라 참사로 인식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심상정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도입 촉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 증권거래 시장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자본시장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그 원인부터 책임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나아가 증권 발행 및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함께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전산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삼성증권의 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시장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와 일부 직원의 도덕적 위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철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 한 유가증권의 발행과 거래보다도 못하다”면서 “금융당국은 재설계 수준에 준하는 자본시장 시스템을 재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하태경 “洪은 입이 폭탄… 제거 없인 국민통합 없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홍 대표의 입이 폭탄이고 이 홍폭탄을 제거하지 않고는 국민통합도 없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대표가 평양공연 ‘봄이 온다’를 두고 봄(Spring)이 아니라 폭탄(Bomb)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 대표는 그러면서 1938년 뮌헨 회담을 비유했는데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다. 당시 뮌헨 회담 직후 독일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공했다”며 “홍 대표가 뮌헨 회담을 비유한 건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금으로선 확신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회담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정치권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급격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평화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 만약 김 위원장이 우리를 속인다면 또 그때 가서 우리 국민이 단합해서 대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이건 사기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의 단합을 저해하는 반국민적, 반국가적 책동”이라며 “홍폭탄을 제거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한반도 긴장만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